

## 끝없는 '대학입시제도' 널뛰기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위원실장

대입제도만 바꾸면 '사교육의 공교육 압도'라는 왜곡현상이 바로 잡힐까? 지식 위주·성적 본위의 사회구조가 쇠신될까? 인성·지성·재능 등이 아니라 암기력·계산력·수험요령이 사람의 가치와 장래를 결정짓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는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마침내 극복될 것인가?

너무 자주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불평과 비판의 소리가 높지만 당국자들인들 어디 그리고 싶어서 그럴까. 제도 개선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공직자의 입장에서 오불관언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이 갈아들 때마다 대입제도를 뒤흔들어 봤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본다면 어느 제도 하나 제대로 됐다고 평가받은 게 없다. 까닭은 분명하다. 언제나 기본 구조는 그대로다. 방법만 달리해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리 없다. 수십 년 동안 국민 모두가 함께 확인한 바가 그것이다.

근년에 와서 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우선 고등학교 교육이 평준화됐으니까 전국 고등학교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라는 것이다. 수능보다는 내신 위주로 학생을 평가하되, 학과성적만을 중시하지 말고 다양한 선발 기준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인성·재능 등이 학생 선발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게 정부의 정책적 주문이다.

일컬어 '3불정책'이다. ①고교등급제 불가, ②대학별 본고사 불가, ③기여입학제 불가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기여입학제는 성격이 다른 문제다. 성적이 아닌 돈으로 원하는 대학의 입학자격을 얻게 하자는 발상은 많이 엉뚱하다. 그러기보다는 정부에

대해 사학지원을 대폭 늘리도록 요구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교육적이다. 사학이 가르치는 학생 또한 국민의 자식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앞의 두 개 원칙은 고교가 작성한 자료에 주로 의존해서 학생을 선발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문제는 고교 평준화가 학력 평준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내신 부풀리기가 광범위하게 행해져 왔는데도, 그것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주문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수상 경력을 고교 측이 의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편중 현상을 보인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모순은 이뿐이 아니다. 고교 평준화는 강조하면서 내신 평준화는 말하지 않는다. 학교차는 인정할 수 없지만 학생간의 학력 차는 입학전형의 자료로 이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줄 세울 수는 없으니까 등급제로 하겠다고 한다. 등급제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왜곡현상은 더 커진다는 것을 왜 생각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과성적 위주의 교육이 좋지 않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리 없다. 그렇지만 재능에 따라 선발한다는 것은 재능에 맞춰 대학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뽑는 문은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일단 문을 통과한 사람은 한테 섞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라고 할 때 정부의 주장은 명분을 잃는다.

기실 재능을 감안한 교육은 진작 학생들이 선택한다. 대학들은 다양한 학과와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취향, 재

능, 장래 진로 등을 따져 지원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학과 혹은 학부별로 요구되는 재능을 분류해서 그것을 전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왕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다양한 전형방식은 정부가 대학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들이 직원 채용 때 실천해 보여야 한다. 공무원 혹은 공기업 직원을 뽑을 때는 필답고사에 의존하고 출신 학교, 학점 등을 감안하면서 대학입시에서는 그러지 못

*정부의 '3불정책'은 정직하지 못하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 명분도 균색하긴 마찬가지다. 엄청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려 초토화 되다시피 하는 까닭을 왜 공교육 내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항상 남의 탓만 한다는 것인가.*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혹 대학 평준화를 염두에 둔 정책이라면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학교차를 없애는 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을 일류대학으로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옳다. 대학을 특성화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면 십년 후, 오십년 후, 백년 후 분야별로 수많은 일류 대학들이 생겨나 있을 것이다.

정부 교육당국의 처사 가운데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또 하나 있다. 입시보다는 교육의 내용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내용은 거의 전적으로 대학과 교수들에게 일임하면서 입시만은 정부 몫으로 틀

어주고 있다. 마치 그것이야 말로 교육인적 자원부의 존재 의의이거나 한 듯한 인상이 다. 대학들이 신뢰를 못 주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려면 대학의 수많은 고급두뇌들이, 지식·양식·도덕성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보다 못하기야 하겠는가.

정부의 '3불정책'은 정직하지 못하다.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좋은 대학이라는 데는

*대학입시의 방법론으로 요령을 피우기보다는 각 단계의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면서 사회의 인력충원 구조와 학력(學力 및 學歷)관련 가치관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차원의 교육당국이 맡아야 할 일이다.*

지망생이 물리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런데도 '3불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대학 평준화 의도가 아니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환상을 확산시켜 놓는 일일 뿐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 명분도 군색하긴 마찬가지다. 엄청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려 초토화 되다시피 하는 까닭을 왜 공교육 내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항상 남의 탓만 한다는 것인가. 교육당국은 학급당 학생 수를 크게 줄이고, 교사들의 사명감과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교육에 빼앗긴 신뢰를 공교육이 되찾도록 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뒀야 옳다.

다시 대학들과 교육당국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세칭 일류대학들이 최근

2008년 입시전형의 방향을 '논술 강화'로 잡았기 때문이다. 학부모나 교육관련 단체들은 '본고사 부활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그게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 의미를 가질 정도라면 강력히 억제하고 나설 게 틀림없다. 그러는 사이에 끼어 학생들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 같아 안타깝다. 어른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대학입시의 방법론으로 요령을 피우기보다는 각 단계의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면서 사회의 인력충원 구조와 학력(學力 및 學歷)관련 가치관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차원의 교육당국이 맡아야 할 일이다. 대학입시 간섭부(干涉部)로서의 교육인적자원부는 오히려 없는 게 낫지 않을까? ■

#### 이진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부산일보 기자, 부산일보 정치부 차장, 국민일보 논설위원, 수석논설위원을 거쳐 현재 국민일보 논설위원 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 정치리더십의 특성』 등이 있다.